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외국인 9명 사망·18명 부상 탈출 노린 방화 참극 부른듯

“햇볕정책 앞으로도 유효”

“한미 신뢰 많이 훼손...美, 5·18당시 軍이동 승인”

금법무 사과...韓총리 철저 수사 지시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보호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화재 피해 중 가장 큰 규모다. (관련기사 3·7면)

11일 새벽 3시55분경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진창난(51)씨 등 중국인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에르킨(47)씨 등 모두 9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또 황하이보(37)씨 등 중국인 17명을 포함,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이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상자는 여수 성심병원과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불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인 3층 304호에서 시작돼 면적 148㎡의 3층 내부로 순식간에 번졌다. 당시 이곳에는 3층에 남자 51명, 4층에 여자 4명 등 모두 55명이 수용돼 있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차 27대와 소방관 등 진화인력 120여 명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보온을 위해 깔아놓은 우레탄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도주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쇠창살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불법 체류자 가운데 일부가 수용시설의 혼란을 틈타 달아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수습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강명덕 출입국관리국장을 급파해 사고 현장을 지휘토록 했다.

사고수습본부는 여수 성심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차렸으며, 각 국 대사관을 통해 유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성호 법무장관은 “국가보호시설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 국가와 유족들에게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명숙 총리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외국인 수용시설. 복도와 벽면이 불에 시커멓게 타 있다. /여수=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세계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75)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일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오전 광주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 것이다. 결국 강제적인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미국과 한국 등 6자 회담 관련국들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입장에 있는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어느 한 국가의 입장이 편중되게 반영된 형태의 정책으로는 결코 처리할 수 없으며, 6자회담의 성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지만 행동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해 부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상당히 주효했고,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신뢰관계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이 훼손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면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조만간 예전의 돈독한 동맹관계로 되돌아 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광주항쟁 당시 20사단의 광주 배치에 대해 미국이 동의했으나 는 질문에 “당시 주한 대사와 주한 미 사령관으로부터 20사단의 이동에는 동의했으나 이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5·18이 끝난 뒤에야 알게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5·18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 서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등을 만난 뒤, 지난 9일 광주를 방문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10일 5·18기념재단과 전남대를 방문한 데 이어, 11일 광주 남구 철석동에서 열린 고사올림이를 본 뒤 서울로 돌아갔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가장 7명중 1명 ‘백수’ 전국가구중 무직가구 14.6% 절반이 연금 등 정부에 의존

가구주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무직가구의 비율이 전국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는 자영업 구조조정, 건설업 등의 경기부진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구직 단념자 등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율은 14.57%로 전년보다 0.55%포인트 증가했다. 7가구 중 1가구의 가구주가 무직상태인 셈이다.

전국가구 중 무직가구의 비율은 2003년 13.43%에서 2004년 13.40%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5년 14.02%, 2006년 14.57%로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 무직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 가구주 연령은 59.04세였고 매달 153만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20만2천원을 조세 및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무직가구는 가구주가 직업이 없어 직접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며 “배우자나 가구원이 생계에 보탬을 주거나 정부로부터의 공적인 보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무직가구의 소득구성비를 살펴보면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전체소득의 절반인 49.4%를 차지했고 근로소득(배우자 및 가구원) 23.6%, 비경상소득 13.2%, 재산소득 11.1%, 사업소득 2.6% 등이

었다. 반면 근로자가구는 전체 소득의 86.1%가 근로소득이었고 이전소득은 4.1%에 불과했다.

전체 실업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직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No.1 자동차강민 전문재철소 원장·판임재철소

POSCO 자동차철소